



박 영 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저출산·고령화 극복,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 해 복지부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자의 87.3%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할만큼 전반적인 국민인식도가 높아졌다. 국민들의 우려와 인식도는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은 좀처럼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이며,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은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언론과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에서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를 먼 미래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그간 낮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향후 10년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2017년), 총인구 감소(2019년) 등 인구구조 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동은 복지, 고용, 산업, 주택, 금융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되며, 서서히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차 기본계획('06~'10)을 수립·시행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보육료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출산·양육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 부담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하는 등 거시적인 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책적 수요가 높은 맞벌이가구,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해 제도개선의 효과성이 반감되었다는 한계도 존재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

계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작년에 제2차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7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들이 협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해 노동계·경영계·학계·여성계·노인단체 등 사회 각 단체를 대상으로 대토론회를 9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연구와 사회적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협의회'와 산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TF를 통해 본격적인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였다. 수차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대책과 과제들을 논의하였으나, 국가 재정여건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효과성 높은 대책을 위주로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간략히 소개하면,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대상을 맞벌이 가정 및 베이비붐 세대로 확대하였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고령사회가 가져올 부정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주택, 금융, 교육, 재정별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5년간 75.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너무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다양하고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

금년은 제2차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첫 해로,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시행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국민과 기업의 참여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요소로, 직장 문화의 개선이 그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국민들 인식변화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문제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높아졌으나, 실제 행동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전히 양육과 가사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었고, 장시간 근무 등 직장 문화는 가족친화적이지 못하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쉽고, 또 고령자가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사회, 기업 등 일상생활을 둘러싼 모든 분야의 주체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전 국민,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가 한층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며,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점점 커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문**